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

숫자를 통한 新 국가경영

2017. 05. 13.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NTENTS

- 01 차기 정부 재정정책
- 0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 04 맺음말



1 차기 정부 재정정책



01 차기 정부 재정정책

1. 공약 이행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

추가 자원 조달 방안 및 규모: 35.6조원

재
정
개
혁

재정지출 절감: 18.4조원

사업성 기금 여유자원 활용: 3조원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용자 사업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1조원

조
세
개
혁

세법 개정: 6.3조원

탈루세금 과세강화: 5.9조원

세외수입 확대: 1조원



소요자원 규모: 35.6조원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4.2조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7조원

교육비 지원: 5.6조원

소상공인 · 중소기업지원: 2.5조원

국방·기타(쌀생산조정제발견차액지원제도기후예측시스템) 4.6조원

01 차기 정부 재정정책

1. 공약 이행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계속)

재원 조달 규모 및 방법: 연평균 35.6조원

재정지출 절감: 18.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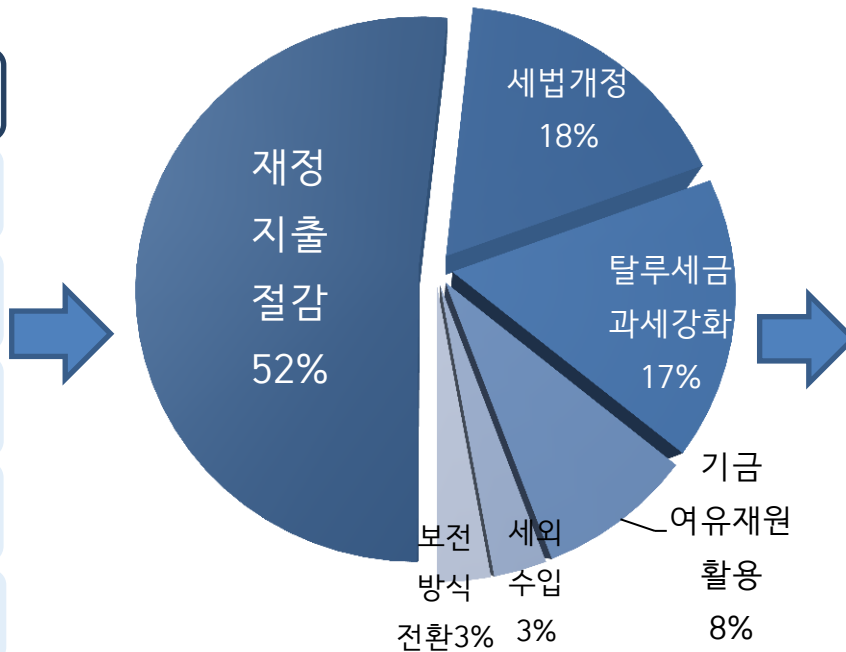
세법 개정: 6.3조원

탈루세금 과세강화: 5.9조원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3조원

세외수입 확대: 1조원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용자 사업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1조원



국채발행 등
정부의 부담
증가

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0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1. 부채의 종류

◆ 정부의 범위(포괄범위)와 산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 종류가 존재함

유형	포괄범위	관리기준	산출기준	2015년 규모(GDP대비)
국가채무 (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592조원 (37.9%)
일반정부부채 (D2)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국제비교 (IMF, OECD)	PSDS* 발생주의	676조원 (43.4%)
비금융공공부문부채 (D3)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공공부문 재정건전성관리	PSDS* 발생주의	1,004조원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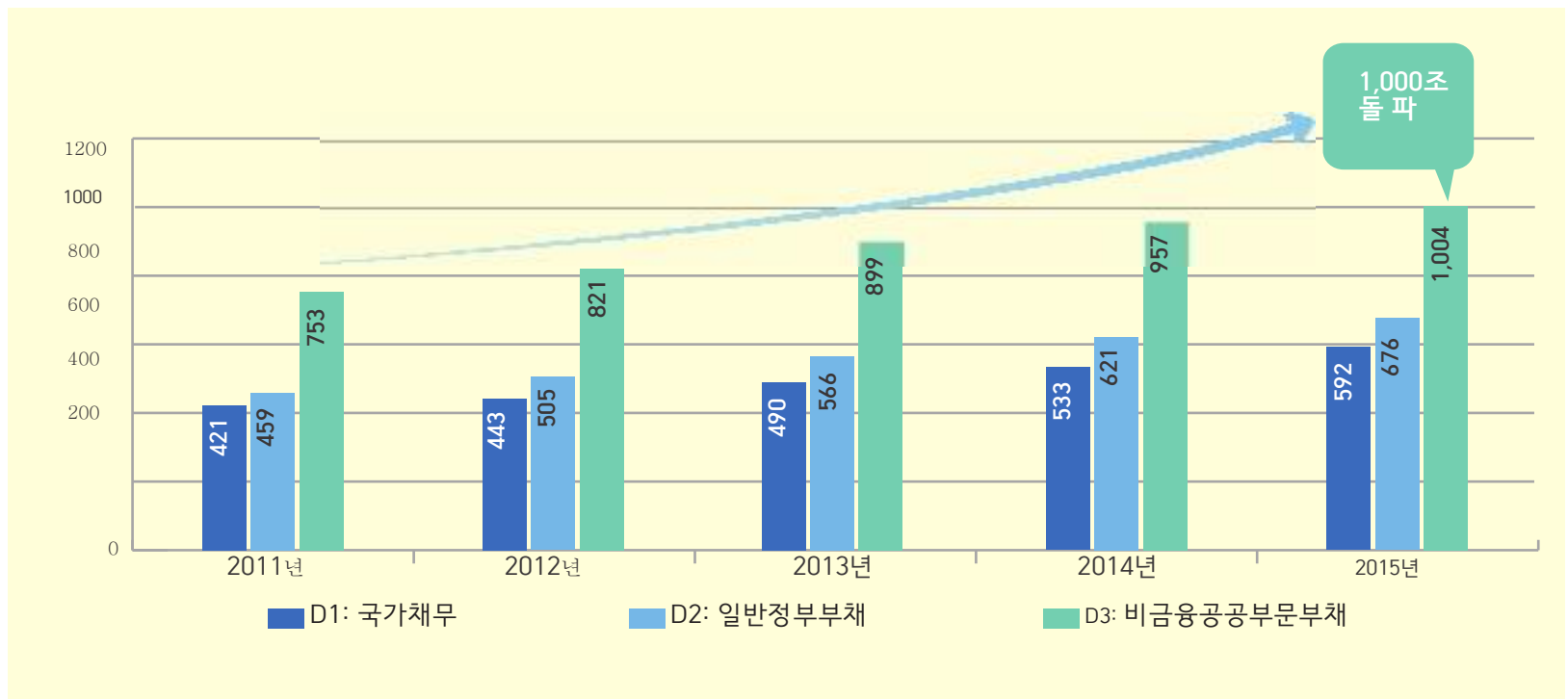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연합하여 제정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0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1. 부채의 종류(계속)

- ◆ 2011회계연도부터 5개년의 부채종류별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조원)



0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1. 부채의 종류(계속)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공공부채와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부채 산출 및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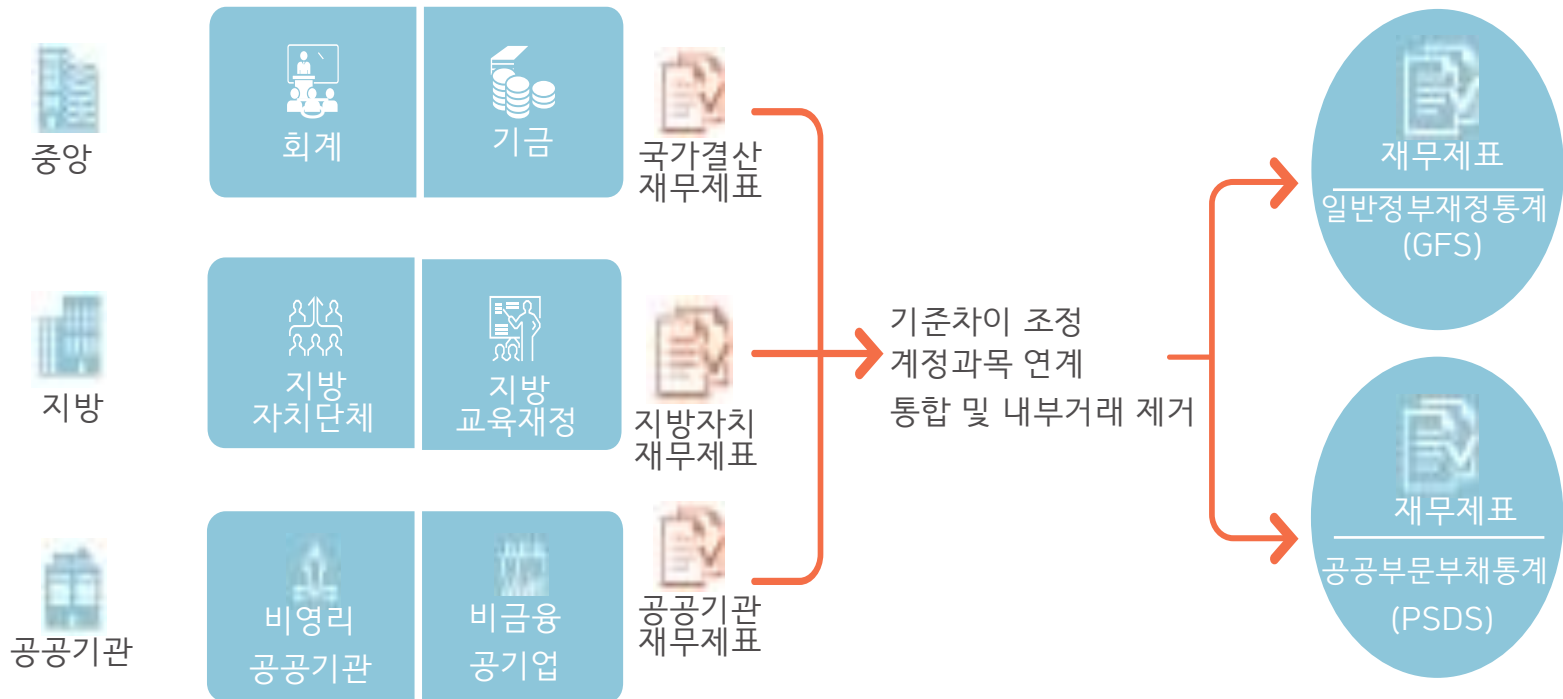
유형	포괄범위	관리기준	산출기준	2015년 규모(GDP대비)
국가채무 (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운영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592조원 (37.9%)
일반정부부채 (D2)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국제비교 (IMF, OECD)	PSDS 발생주의	676조원 (43.4%)
비금융공공부문부채 (D3)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공공부문 재정건전성관리	PSDS 발생주의	1,004조원 (64.4%)

0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2. 발생주의 재정통계

◆ 광의의 통합재무제표 작성 개념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자산·부채를 한눈에 파악

⇒ 정부 재정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효율적 활용



02 발생주의 재정통계로 보는 국가 재정

3. 정부 자산과 부채의 비교

◆ 중앙회계 · 기금의 자산부채와 일반정부(중앙 · 지방정부)의 자산부채 금액 비교

⇒ 작성대상인 정부범위와 작성기준에 따른 차이



▪ 국가회계기준(발생주의)에 따라 중앙회계 · 기금의 재무제표 작성

▪ GFS(발생주의)에 따라 일반정부(중앙 · 지방)의 재무제표 작성

▪ GFS에서는 총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작성기준에 따른 차이 발생

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1. 재정건전화법

관리방안 마련

◆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함

●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명시한 **재정준칙**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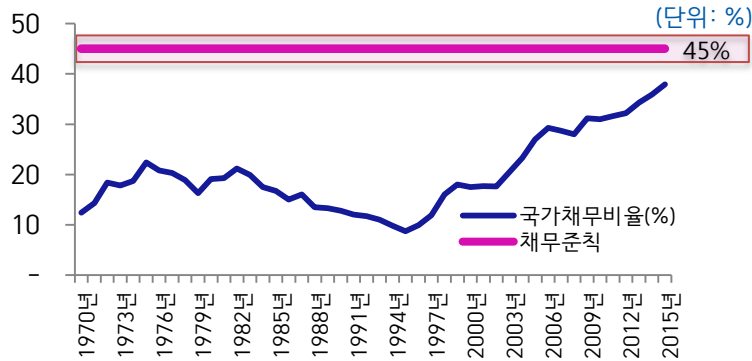
채무준칙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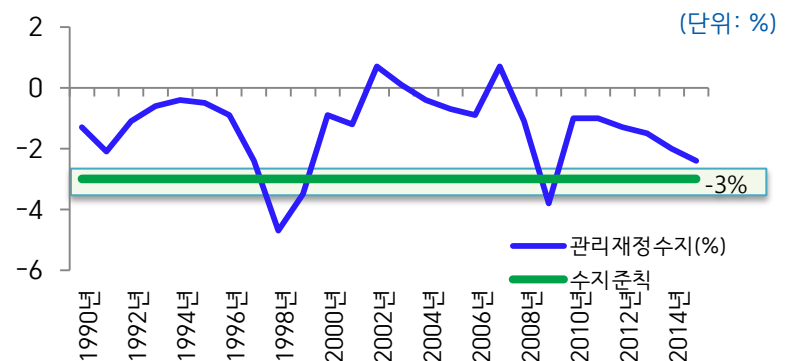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관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 추이



* 국가채무(D1)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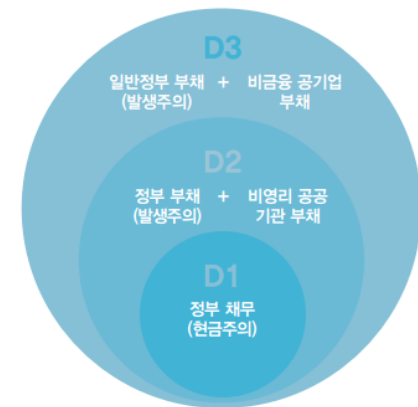
* 관리재정수지 = 현금주의 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등) 수지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1. 재정건전화법(계속)

한계 및 개선방향

- ◆ 재정준칙 적용 시 현금주의 기준인 D1관점에서만 접근함에 따라, 발생주의 개념으로 확장된 부채에 대한 관리 전무
 -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을 재정준칙으로 설정할 때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재정수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를 활용하는 경우 재정준칙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현금주의는 단기측면만 고려되는 반면, 발생주의는 중장기 측면이 고려됨
- ◆ 우리나라는 특히 공공부문부채 중 공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공공부문 기준의 재정준칙(예: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을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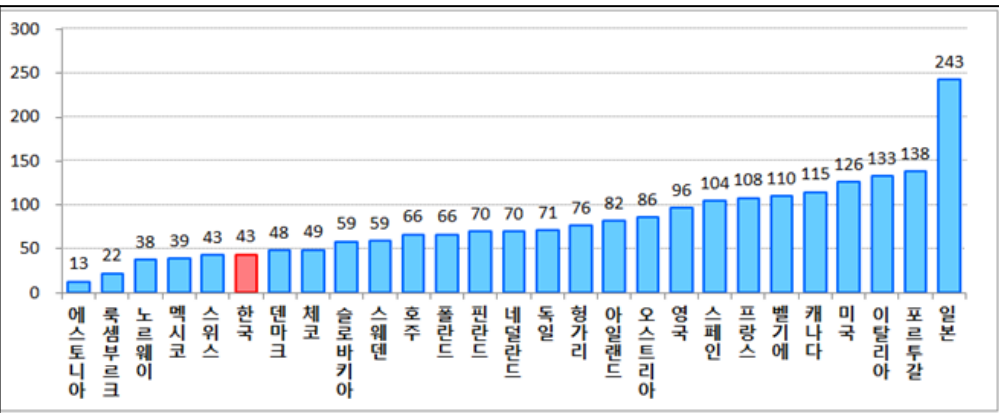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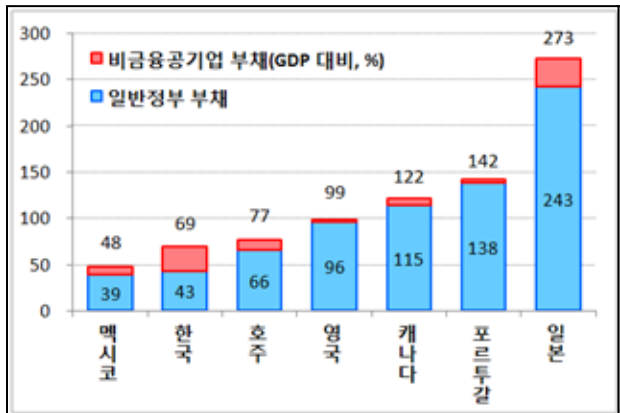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2. 재정통계의 국제비교

◆ 재정통계는 매년 IMF와 OECD에 제출되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제비교가 가능

국가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D3)

OECD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D2)



Research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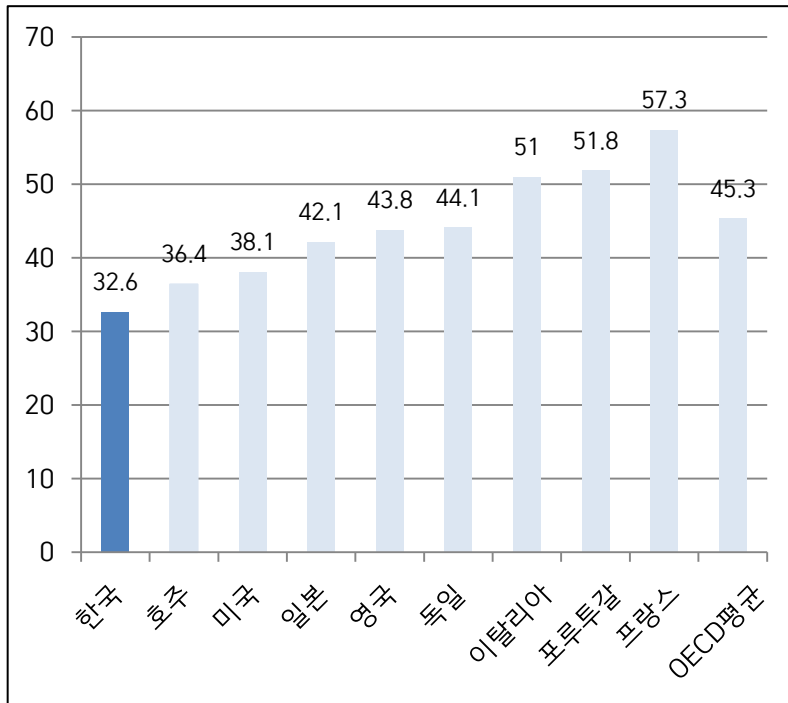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가?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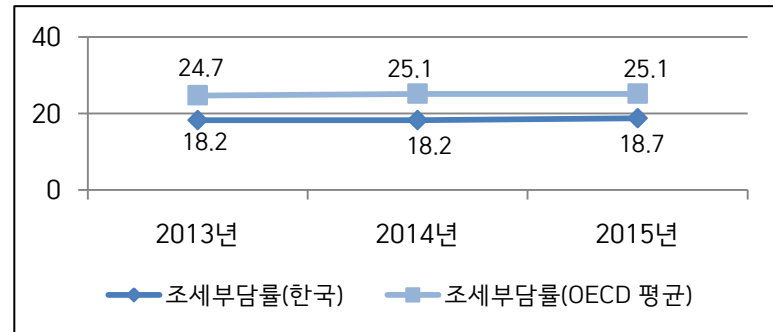
2. 재정통계의 국제비교(계속)

◆ 재정통계는 부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표의 국제비교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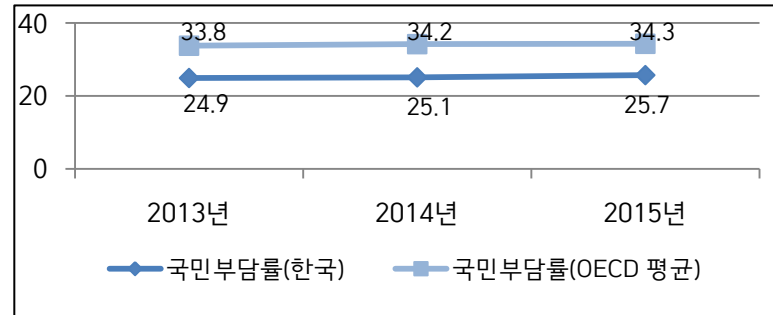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별 지출규모*



OECD 평균 대비 조세부담률



OECD 평균 대비 국민부담률*



* GDP대비 국가별 정부지출액: 정부지출액/GDP (14년 기준)

* 국민부담률 = 조세수입 + 사회보험료

Research Question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2. 재정통계의 국제비교(계속)

◆ 재정통계는 IMF와 OECD에 제출하여 공시되며, 『열린재정』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국내

www. Openfiscaldate.go.kr

해외

www. Imf.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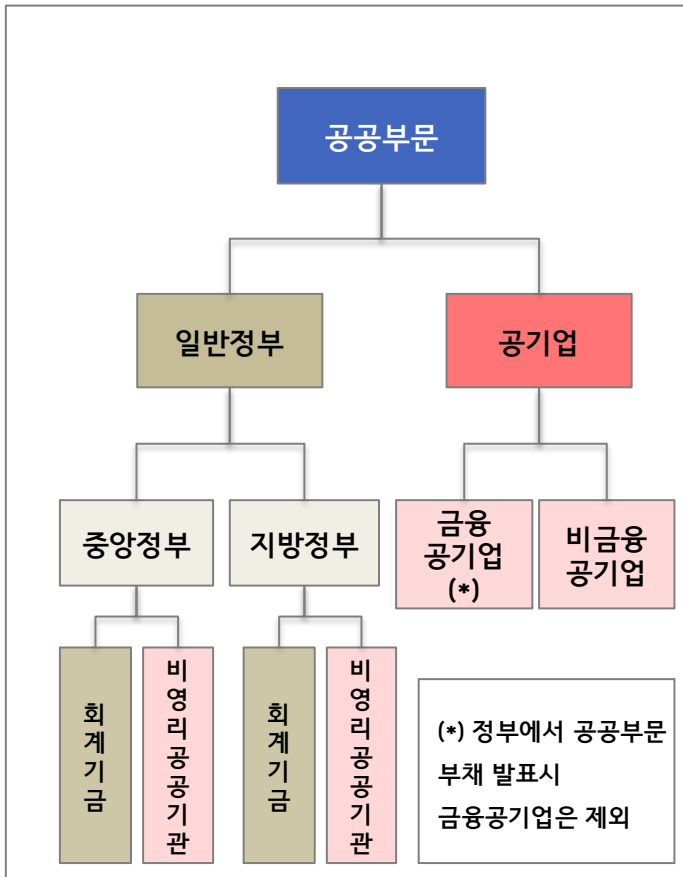
www. stats.oecd.org



03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활용

3. 공공회계기준의 통일성 마련

공공부문 포괄범위



재정통계 산출기준

적용기준

- 각각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국제통계기준에 따라 기준차이를 조정하여 산출

공공기관 회계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손상평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등을 보유하는 경우 IFRS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 기타공공기관 통일된 회계기준 체계 부재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 자체 정관 등 다양한 회계기준 혼재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제정 마련
- 기타공공기관 회계제도 정비 필요성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 회계기금의 경우 국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적용

4 맺음말



04 맺음말

현재

의사결정시 현금주의 재정통계가 활용됨



나아갈 방향

발생주의 재정통계가 재정 정책의사 결정에 활용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CONTACT US:

박윤진 팀장 (yopark@kipf.re.kr)

정수진 전문연구원 (sjjung@kipf.re.kr)

김민정 회계사 (minjkim@kipf.re.kr)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

2017. 05. 1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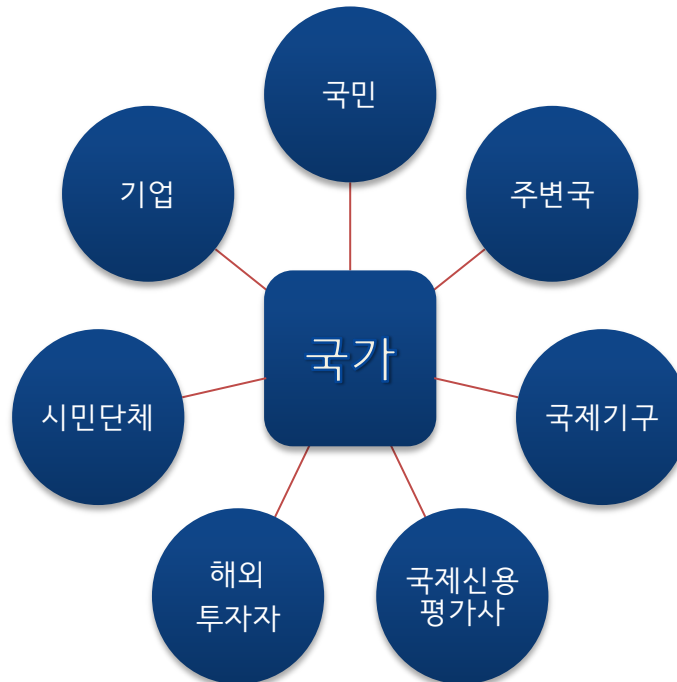
- 01 연구배경
- 02 국가부채 정의 및 범위
-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01 연구배경

1. 국가의 이해관계자

- ◆ 국가는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국내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기관 및 해외 투자자 등 **국제적 이해관계자**가 존재
 - 최근 세계금융위기와 유로존 국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국가부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01 연구배경

2. 국제통계지침 도입

- ◆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기준인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 2001**을 도입
 - GFS 2001 도입으로 인해 현금주의로 산출되던 재정통계를 발생주의로 전환
 - 정부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앙관서와 더불어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재정통계를 산출
- ◆ 또한 **공공부문 부채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이하 PSDS)**을 도입하여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포

국제통계지침 종류

	대상	제출	활용
GFS	재정운영, 재정상태	IMF	국제비교
PSDS	채무상품	OECD	재정건전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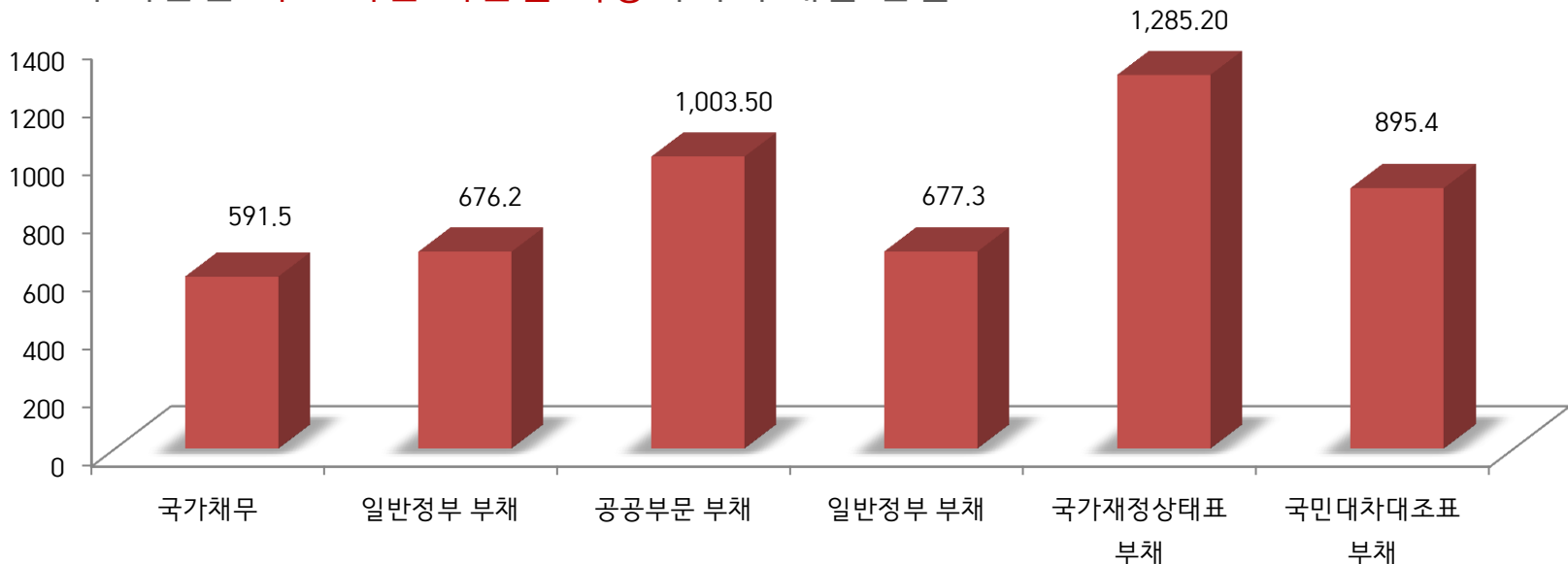
4

01 연구배경

3. 국가부채 산출 현황

◆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1,003.5조원으로 집계되어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채가 신뢰성 있는 부채인지 의문을 제기

● 부채의 작성 및 발표가 정부,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행해지며, 각각의 기관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부채를 산출



02 국가부채 정의 및 범위

1. 국가부채의 정의

- ◆ 국가부채를 산출하는 기준은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국가재정법** 등의 국내기준이 있으며, 이와 함께 **재정통계편람(GFS)과 공공부문 부채작성 지침(PSDS) 및 국민계정체계(SNA)** 등의 국제기준이 존재

국가회계기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

지방회계기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국가재정법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02 국가부채 정의 및 범위

1. 국가부채의 정의

재정통계편람
(GFS)

특정 상황하에서 한 단위(채무자)가 다른 단위(채권자)에 자금이나 여타 자원을 공급할 의무

공공부문 부채작성
지침(PSDS)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 권리

국민계정체계
(SNA)

특정 상황하에서 한 제도단위(채무자)가 다른 제도단위(채권자)에 대해 일회 이상 지불할 의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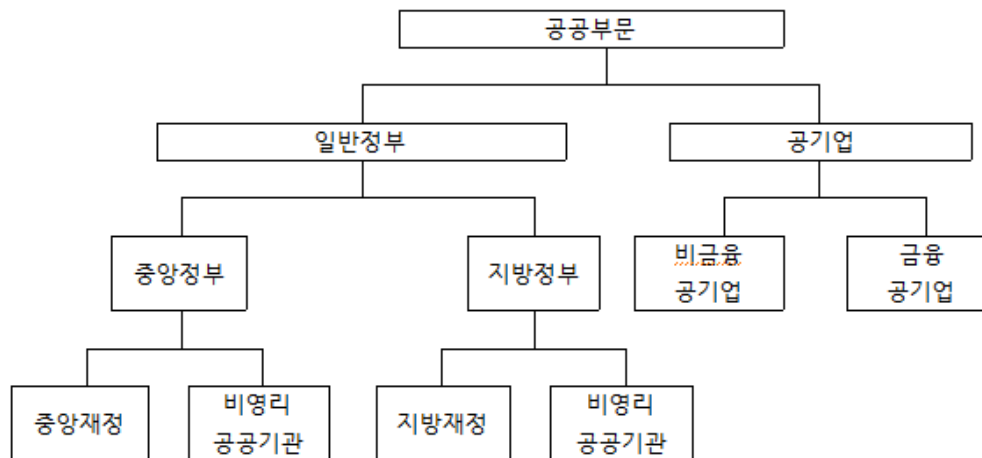
- ◆ 각 정의를 종합하면, **국가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영향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현재의무**로 정의할 수 있음

02 국가부채 정의 및 범위

2. 국가부채의 범위(포괄)

- ◆ **국내기준**은 국가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
 - 국가의 범위를 국가재정으로 한정하여 국가채무와 국가재정상태표 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
- ◆ **국제기준**은 재정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
 - 국가의 범위를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채 또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

공공부문 포괄범위



02 국가부채 정의 및 범위

2. 국가부채의 범위(인식)

◆ 국가부채의 인식범위는 각 기준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

-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세입세출외현금, 파생상품, 주식및투자지분, 연금충당부채, 충당부채, 사회보장 의무 등이 있음

기준별 인식 차이

구분	국제기준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K-IFRS
	GFSM	PSDS			
세입세출외현금	인식	인식	미인식	인식	인식
파생상품	포함	제외	인식	NA	인식
주식및투자지분	포함	제외	NA	NA	자본
연금충당부채	인식	인식	인식	NA	인식
충당부채	미인식	미인식	인식	인식	인식
사회보장 의무	미인식	미인식	일부 인식	NA	NA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0. 국가부채의 종류

-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정부,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산출
 - **정부**에서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일반정부 부채(GFS)을 산출하며, 이와 더불어 국가재정상태표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
 - **한국은행**은 국민대차대조표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

국가부채 산출 현황

부채종류	회계원칙	회계실체	보고실체
국가채무(D1)	현금주의	중앙 및 지방재정	정부
일반정부 부채(D2)	발생주의	일반정부	정부, OECD
공공부문 부채(D3)	발생주의	공공부문	정부, OECD
일반정부 부채(GFS)	발생주의	일반정부	정부, IMF
국가재정상태표 부채	발생주의	중앙재정	정부
국민대차대조표 부채	발생주의	일반정부	한국은행, OECD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1. 국가채무(D1)

- ◆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산출된 채무를 의미하며, 현금주의에 따라 산출된 채무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재정에 한하여 산출되며, 부채 중 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국한하여 산출
 - 정부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로,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활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국가채무 (GDP 대비,%)	420.5 (31.6)	443.1 (32.2)	489.8 (34.3)	533.2 (35.9)	591.5 (37.9)
○ 중앙재정	402.8	425.1	464.0	503.0	556.5
- 국채	397.1	420.0	459.5	498.1	551.5
- 차입금	2.5	2.3	1.9	2.6	3.3
- 국고채무부담행위	3.3	2.8	2.7	2.4	1.7
○ 지방재정	17.6	18.0	25.7	30.1	34.9

- ◆ 2015년 말 현재 국가채무(D1)는 591.5조원으로 GDP대비 37.9%를 차지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2. 일반정부 부채(D2)

- ◆ 일반정부 부채는 OECD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PSDS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발생주의 기준이 적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각각의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
 - 매년 OECD에 제출되며, 일반정부 부채는 정부단위와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부채로, 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	459.2 (34.5)	504.6 (36.6)	565.6 (39.6)	620.6 (41.8)	676.2 (43.4)
○ 중앙정부	425.9	466.7	522.5	569.3	620.5
- 중앙재정	394.4	425.7	479.6	252.8	579.2
- 비영리공공기관	43.1	52.3	53.6	24.4	52.8
○ 지방정부	51.4	53.7	54.6	58.6	65.0
- 지방재정	50.7	53.3	54.3	58.1	65.4
- 비영리공공기관	1.2	1.1	1.1	1.2	1.0

- ◆ 2015년 말 현재 일반정부 부채(D2) 는 676.2조원으로 GDP대비 43.4를 차지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3. 공공부문 부채(D3)

- ◆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를 확장한 개념으로 PSDS 기준 하에 발생주의 원칙이 적용
 -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괄하여 산출되며, 매년 OECD에 보고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산출한 부채로, 국가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D2)		(단위: 조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	753.3 (56.5)	821.1 (59.6)	898.7 (62.9)	957.3 (64.5)	1,003.5 (64.4)	
○ 일반정부	459.2	504.6	565.6	620.6	676.2	
- 중앙정부	425.9	466.7	522.5	569.3	620.5	
- 지방정부	51.4	53.7	54.6	58.6	65.0	
○ 비금융공기업	363.9	389.2	406.5	408.5	398.9	
- 비금융공기업(중앙)	323.9	343.5	362.0	366.3	358.2	
- 비금융공기업(지방)	48.2	51.3	50.9	49.4	47.7	

- ◆ 2015년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D2) 는 1,003.5조원으로 GDP대비 64.4%를 차지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4. 일반정부 부채(GFS)

- ◆ 일반정부 부채(GFS)는 IMF의 GFS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산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여 산출되며, 각 정부 부채는 재정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
 - 매년 IMF에 보고되며, 산출된 부채는 주로 국가별 재정비교를 위해 사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	-	506.3 (36.8)	567.4 (39.7)	621.7 (41.9)	677.3 (43.5)
현금및예금	-	-	-	-	-
채무증권	-	399.4	449.3	484.8	524.8
융자	-	44.2	56.6	69.7	93.5
주식및기타지분	-	0.4	0.4	0.4	0.4
보험책임준비금	-	-	-	-	-
파생금융상품	-	1.4	1.4	0.7	0.8
기타미스계정	-	61.0	59.8	66.1	57.9

- ◆ 2015년 말 현재 일반정부 부채(GFS)는 **677.3조원**으로 일반정부 부채(D2)와 **1.1조원 차이**가 발생하며 차이 원인은 파생상품 0.8조원과 주식및기타지분 0.4조원에 기인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5. 국가재정상태표 부채

- ◆ 국가재정상태표 부채는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발생주의 기준**이 적용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재정)**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산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부채 총계	773.6	902.1	1,117.9	1,212.8	1,285.2
Ⅰ. 유동부채	82.0	86.8	108.6	119.1	132.8
Ⅱ. 장기차입부채	294.8	318.7	347.8	381.9	421.0
Ⅲ. 장기충당부채	374.8	472.1	633.8	682.3	699.9
Ⅳ. 기타비유동부채	21.9	24.5	27.7	29.4	31.5

- ◆ 2015년 말 현재 국가재정상태표 부채는 **1,285.2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동일한 포괄범위인 일반정부 부채(D2) 중 중앙재정 부채와 **706.0조원의 차이**가 발생
 - 차이의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로 국제기준에 따라 부채 산출 시 별도로 부기표시 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상태표 부채에는 659.9조원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
 - 그 외에 **퇴직수당충당부채, 사회보장성기금, 파생상품부채** 등이 국제기준에 따른 부채의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차이가 발생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6. 국민대차대조표 부채

- ◆ 국민대차대조표 부채는 UN의 SNA 기준에 따라 작성된 부채로 발생주의 원칙이 적용
 - 일반정부를 포괄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되며 각 정부에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	656.5 (49.3)	710.5 (51.6)	747.5 (52.3)	820.4 (55.2)	895.4 (57.5)
금과 SDRs	0.0	0.0	0.0	0.0	0.0
현금과 예금	20.0	25.6	33.3	41.4	53.1
보험 및 연금	0.0	0.0	0.0	0.0	0.0
채권	497.8	546.6	576.6	631.9	694.9
대출금	12.6	10.8	11.2	15.8	13.0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25.6	25.7	26.5	27.3	27.9
파생금융상품	1.6	1.4	1.8	0.5	0.7
기타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98.9	100.5	97.9	103.4	105.8

- ◆ 2015년 말 현재 국민대차대조표 부채는 895.4조원으로 집계

03 국가부채 종류 및 규모

6. 국민대차대조표 부채

- ◆ 국민대차대조표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D2)는 동일한 포괄범위의 부채를 산출하지만 국민대차대조표 부채는 895.4조원, 일반정부 부채(D2)는 676.2조원으로 각 부채는 **219.2조원**의 차이

내부거래	국민대차대조표 부채	미제거
	일반정부 부채(D2)	제거
부채측정	국민대차대조표 부채	시장가치
	일반정부 부채(D2)	명목가치
지분증권	국민대차대조표 부채	총액
	일반정부 부채(D2)	순액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1. 국가부채 관리현황

- ◆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부채 중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국가의 주요 부채로 인식하여 관리·감독
- ◆ 정부는 법률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채무(D1)를 관리
 -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를 대상으로 **당해 회계연도** 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해 국채 발행과 차입 계획을 제시

국가채무 관리계획		(단위: 조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 국가채무 (GDP 대비,%)	638.5 (39.4)	682.7 (40.4)	722.5 (40.9)	756.8 (40.7)	793.5 (40.7)	
○ 중앙재정	603.3	646.9	688.2	724.0	762.4	
- 국채	599.0	643.0	684.9	722.2	761.0	
- 차입금	3.9	3.7	3.1	1.7	1.4	
- 국고채무부담행위	0.5	0.2	0.15	0.09	0.05	
○ 지방재정	35.2	35.7	34.3	32.8	31.0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1. 국가부채 관리현황

◆ 정부는 국가채무(D1) 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관리

-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대응자산이 없어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해야하는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 국가채무	638.5	682.7	722.5	756.8	793.5
○ 적자성 채무 (비중,%)	368.7 (57.7)	397.5 (58.2)	423.3 (58.6)	448.5 (59.3)	471.8 (59.5)
○ 금융성 채무 (비중,%)	269.8 (42.3)	285.2 (41.8)	299.2 (41.4)	308.4 (40.7)	321.7 (40.5)

◆ 정부는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 재정준칙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국가채무**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대상으로 도입
-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명시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1. 국가부채 관리현황

- ◆ 국가채무(D1)과 달리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에 대하여 **증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연도에 집계된 부채의 현황을 **부문별, 항목별로** 공시

공공부문 항목별 부채		(단위: 조원)					
		2014년(A)		2015년(B)		증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무증권	697.8	72.9	733.1	73.0	35.3	0.1	
차입금	99.9	10.4	109.5	11.0	9.6	0.6	
기타미지급금	159.7	16.7	161.0	16.0	1.3	(0.7)	
합계	957.3	100.0	1,003.5	100.0	46.2	-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2.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 관리공공부채 산출

-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시 공공부문 부채 총량과 더불어 사회보장성기금과 사회보장성 공공기관을 제외한 **관리공공부채를 산출**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 관리대상 부채지표를 산출할 필요

◆ 재정준칙에 발생주의 정보 활용

- 우리나라에서 채무준칙으로 규정할 예정인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어 발생주의 계정이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채무 총량 관리방안과 더불어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병행하여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자산·부채 종합관리(Asset & Liability Management)

-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부채의 가치변동은 대응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에 연동되어 부채의 위험이 상쇄됨 따라서 공공부문도 **ALM의 도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공공부문 부채 산출 시 금융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2.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 중기 부채관리계획 수립

-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집계 현황만을 공포하고, 중기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중기적 규모를 예측**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

◆ PSDS 세부명세 활용

- 공공부문 부채를 **PSDS 세부명세를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부채의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장점**

PSDS 제공 정보

분류	소분류
총 채무 합계	총 채무
상품 유형별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만기별	원 만기별, 잔존 만기별
표시 통화별	자국 통화 표시, 외화 표시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채권자, 국외 채권자
부기사항	총당부채

04 국가부채 관리방안

2. 국가부채 관리 개선방안

◆ 공공부문 부채 범위 확장

-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준인 PSDS에 의하면 공공부문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부문이라고 정의하고 공공부문에 **금융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공기업을 손실 발생은 곧 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미
- 공공부문 부채(D4)를 산출 시 앞서 논의되었던 **순부채를 활용**하여 실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부채를 병행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합니다!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05.13

박청규 교수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목차안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중요성
- 2) 정부의 국가부채관련 통계발표
- 3) 국가부채측정을 위한 Fiscal Rules

2.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1)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 2) 국가부채의 예측가능성 측정
- 3) D2(일반정부부채)의 국제비교

3. 정책적인 시사점

- 1) 국가부채의 총량 관리
- 2)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부채의 질적인 관리
- 3)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troduction

- 1)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중요성
- 2) 정부의 국가부채관련 통계발표
- 3) 국가부채측정을 위한 Fiscal Rules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troduction

- 국가부채의 측정과 보고의 중요성
 -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약 40%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국가부채측정의 범주선택 및 그 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부채의 올바른 측정과 보고가 필요한 실정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troduction

- 정부의 국가부채관련 통계발표

- 우리나라는 OECD 및 IMF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부채통계를 발표함.

유형	포괄범위	2015년 금액 (GDP대비)
국가채무 (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592조원 (37.9%)
일반정부부채 (D2)	D1+비영리공공기관	676조원 (43.4%)
비금융공공부문부채 (D3)	D2+비금융공기업	1,004조원 (64.4%)

- 국가부채의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국가부채와 관련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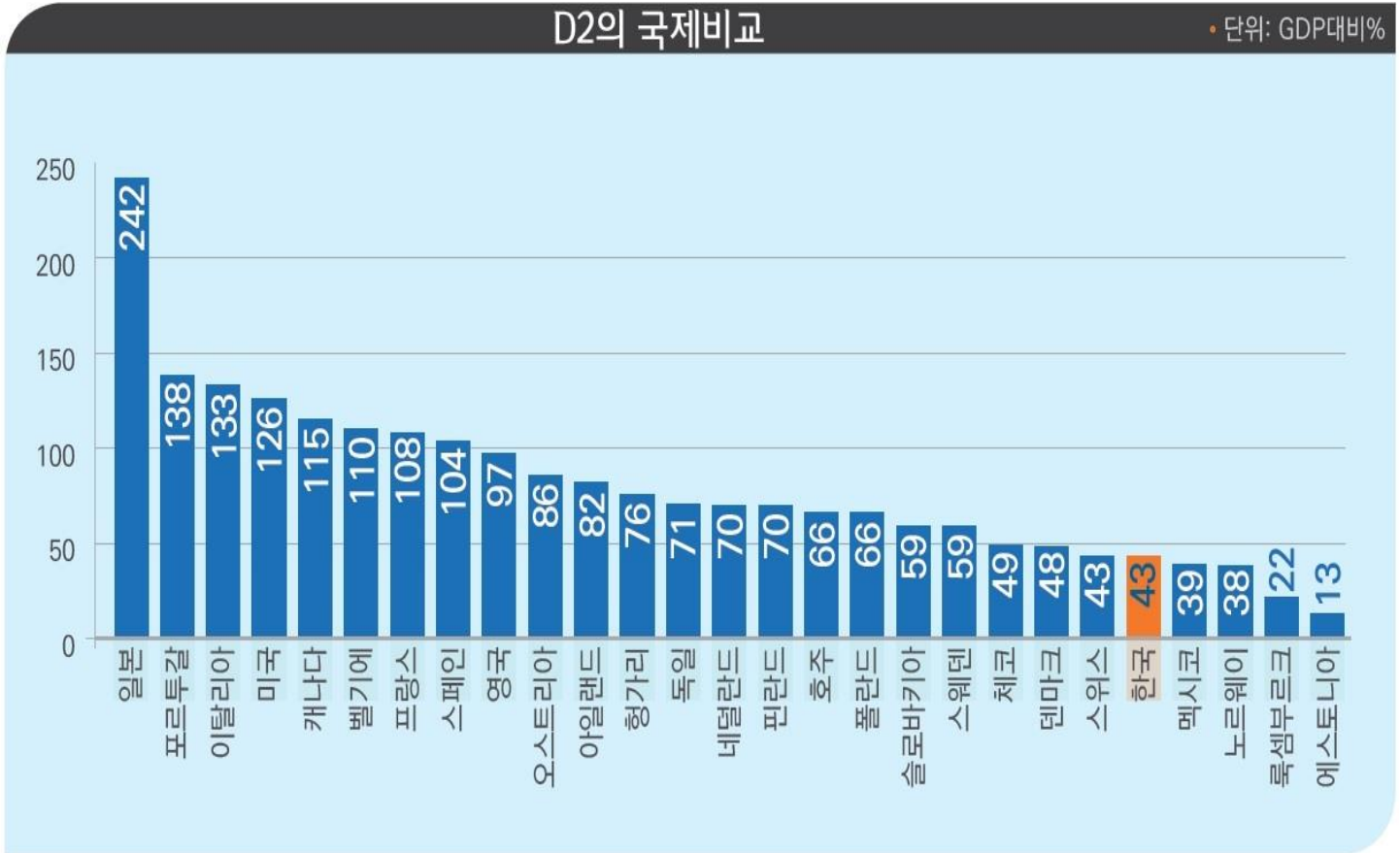
※ 국가채무 국제비교 ('15년, OECD)



출처: OECD EO('15.11월), 한국은 D1 기준(D2 기준 41.8% ['14결산치]), OECD 회원국은 D2 기준

D2자료의 산출에 시간이 오래 걸림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4.5)



출처: 기획재정부 결산자료 (2015회계연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troduction

- 정부 및 정치권의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국가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 및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정책이 국가부채의 증가를 부추김.
 - 증세는 없고 지출을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필연적 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채의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국제비교를 통한 부채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쉬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troduction

- 국가부채측정을 위한 Fiscal Rules
(by IMF, OECD, World Bank)

Delineation of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Debt				
Debt Instrument	D1	D2	D3	D4
채무증권&차입금	■	■	■	■
D1+ SDR's 예금등		■	■	■
D2+ Other Accounts Payable			■	■
D3+ Insurance, Pensions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

장점: 통용되고 있는 여러 통계들의 직접적인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 짐
 예) Maastricht Debt (D2A) and PSDS Guide/GFSM 2014 (D4)

다만, 대한민국의 부채통계(D1~D3)는 상품범위와 포괄범위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부채), D3(공공부문부채)로 구분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troduction

- 국가부채측정을 위한 Fiscal Rules (by IMF, OECD, World Bank)
 - Sector Coverage: General vs. Central
 - Measures: National Currency, % of GDP, USD
 - Calculations of D1-D4 indicators
 - Calculation rules and treatment of zeroes and N/A data
 - Valuation of debt instruments:
Nominal value, face value, book value, fair value, market value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Research Methodology

- 1) 국가부채의 측정 및 범위
- 2) 국가부채의 예측가능성 측정
- 3) D2(일반정부부채)의 국제비교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국가부채의 측정 및 범위
 - 현재 국가부채는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한 GFS 2001(D2)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를 보고함.
 - 현금주의 국가채무(D1)와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범위를 넓힌 D3 는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 간의 비교는 D2를 기반으로 하지만 발생주의 도입의 효과분석을 위해 D1 및 D3의 비교도 필요함.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국가부채의 예측가능성 측정

$$\text{Gov Debt}_{t+1} = \alpha + \beta * \text{Gov Debt}_t + \varepsilon$$

(β 계수와 Adj-R² 측정)

→ 국가간의 비교가능성 측정 (D2기준 및 D1, D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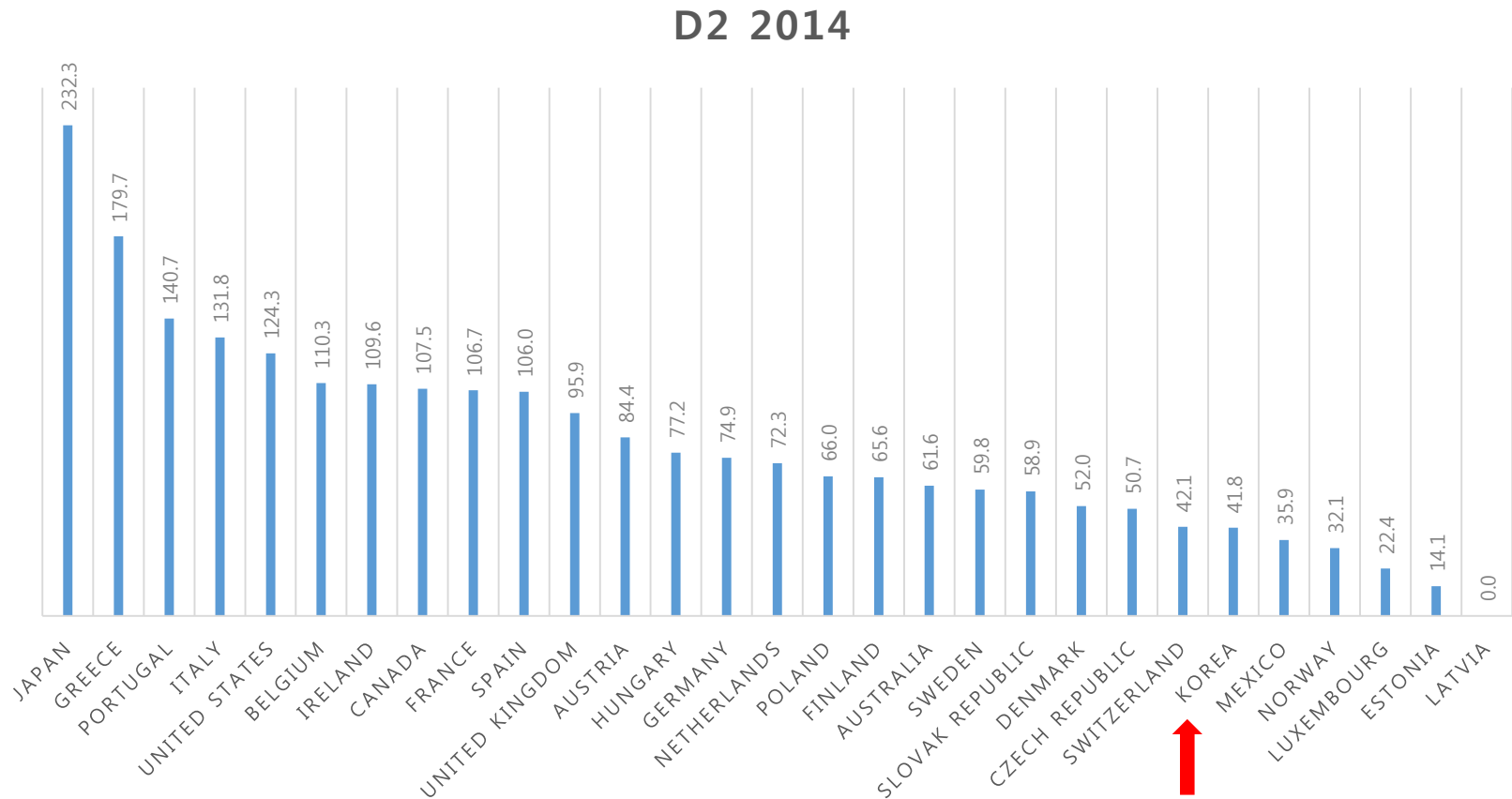
국제기준에따른 국가간의 그룹별 비교

예) 부채의 가치: Nominal value vs. Market Value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D2(General Government Debt)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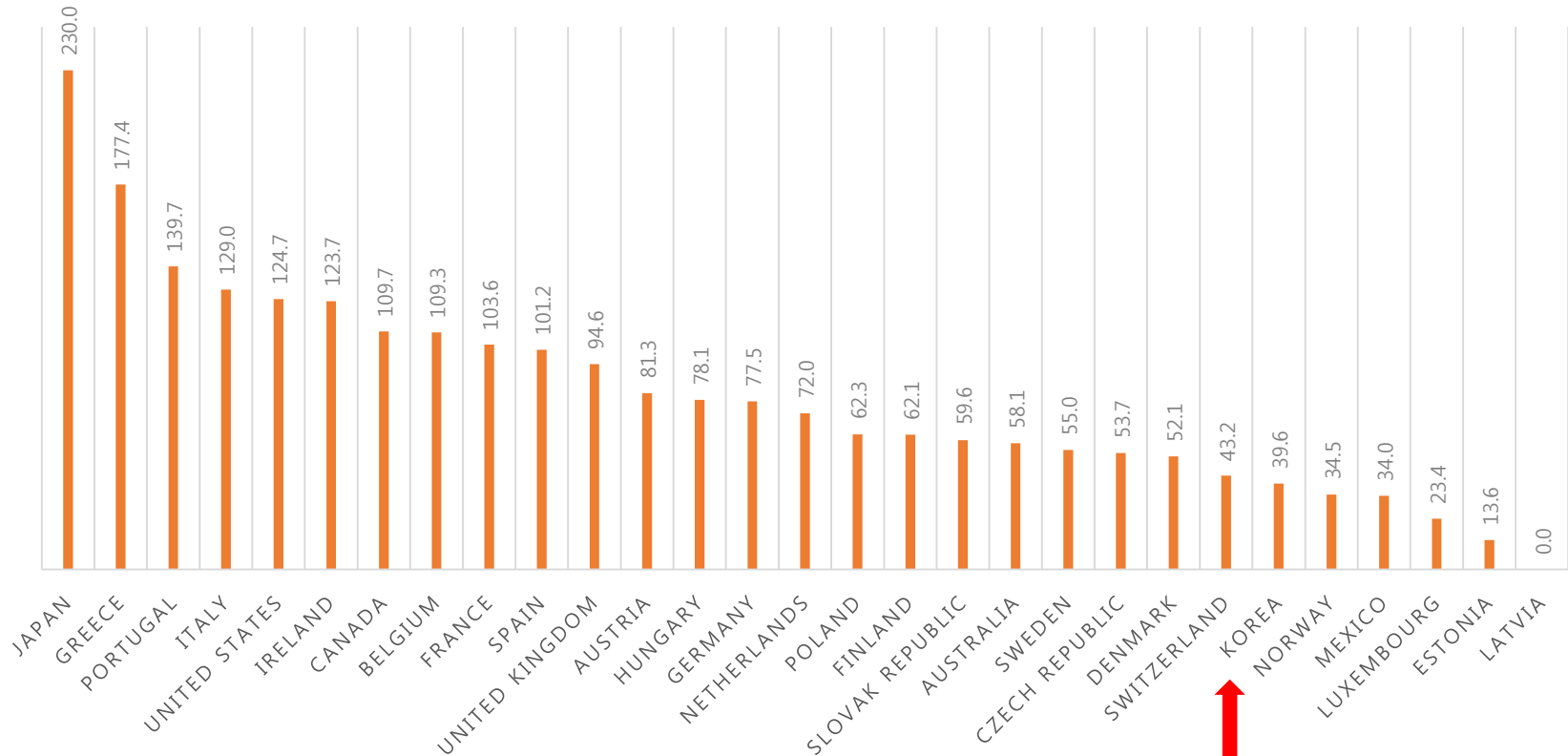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D2(General Government Debt)의 국제비교

D2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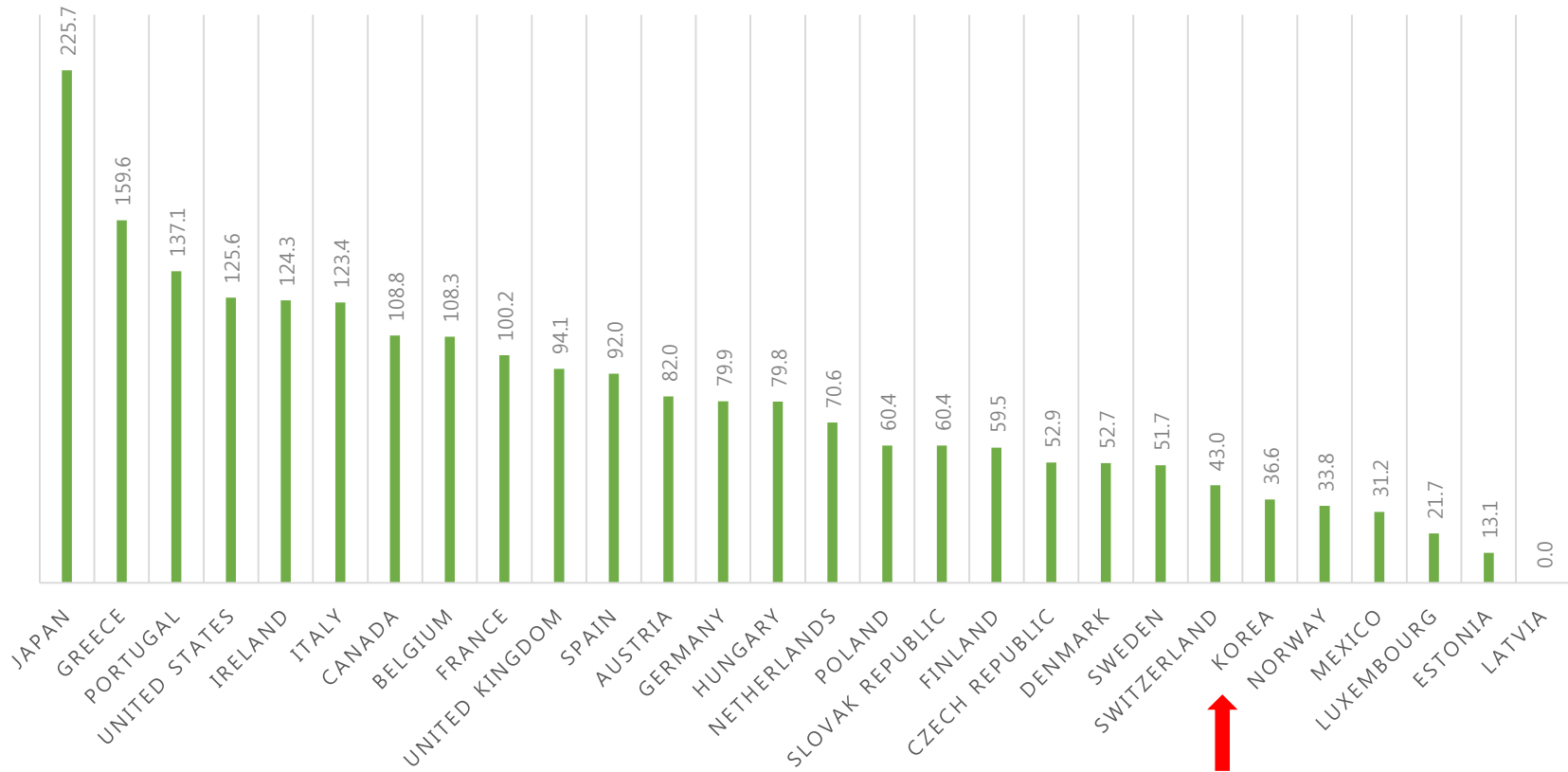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D2(General Government Debt)의 국제비교

D2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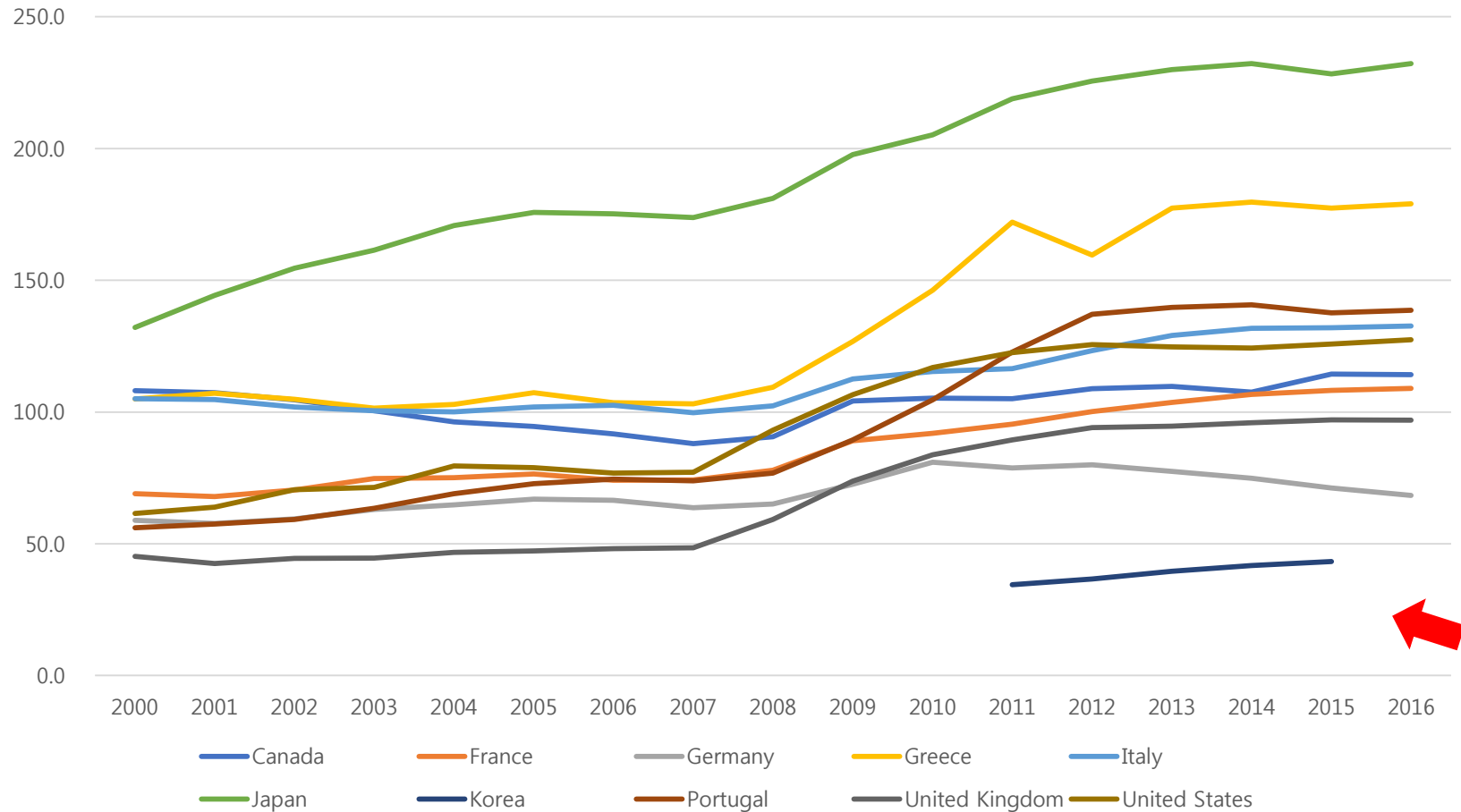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D2(General Government Debt)의 국제비교

주요국 시계열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국가부채의 측정과 범위

Research Methodology

● 국가별 특징

- Korea: Data are consolidated and expressed in nominal value. The consolidated public sector debt includes general government debt and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
- Australia: Australian data follows the SNA 2008 methodology.
- New Zealand: The figures reported for New Zealand are based on the New Zeal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Portugal: Other accounts payable data (AF8) are at market value.

→ 많은 부분 차이점이 존재함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 분석모형

Research Methodology

- 국가부채의 예측가능성과 장기전망: D1, D2, D3의 비교
- 국가별 차이점을 분석(Fiscal Rules 및 개별국 작성지침)
- 가능한 최선의 범주 및 모형을 선택

정책적인 시사점

Implications

- 1) 국가부채의 총량관리
- 2)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부채의 질적인 관리
- 3)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정책적인 시사점

Implications

- 국가부채의 총량관리

- 국가부채의 총량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함.
- 재정건전성의 향상에 기여함.

-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부채의 질적인 관리

- 국가부채의 총량뿐만 아니라 범주별 예측가능성을 분석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함.
- 국가부채 범주별 예측가능성의 비교를 통해 관리지표로서의 역할을 고려함.

-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 정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채의 총량을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한 현재 국가부채의 규모 및 질적인 수준을 측정함.
- 정부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함.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배기수 교수 (충북대학교)

2017.5.13(토)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연구 배경 및 목적

- 나라살림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세입과 세출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
- 세입이 세출보다 크거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용 이월액이 발생함.
- 이러한 불용 이월액은 나라살림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용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매년 국회 결산검사 시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불용·이월액에 대해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재정운영표의 순원가 정보와의 관계성에 대해 실증분석하여 세출 불용·이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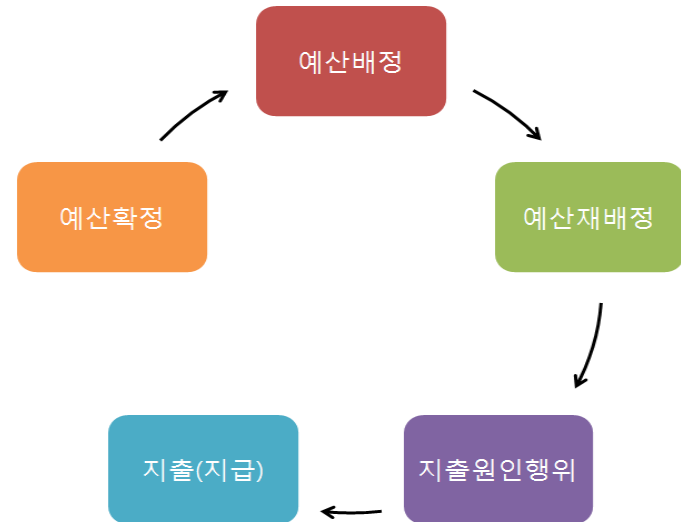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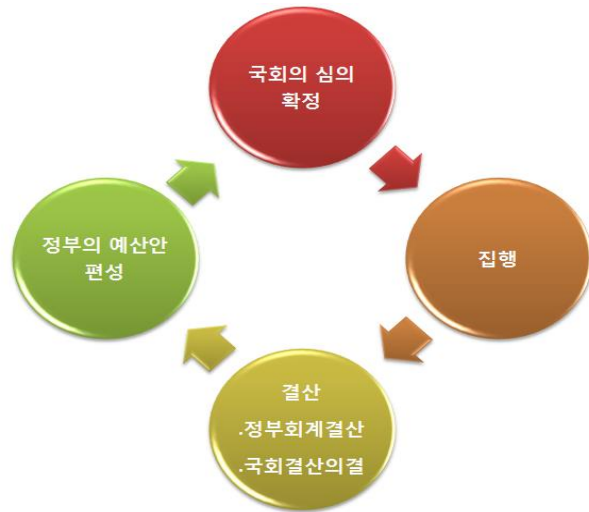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 국가재정운영표의 순원가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후 유의성 등을 분석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활용한 이월·불용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을 위해 2014~2015년 기재부의 중점관리 관리사업(500억이상 단위사업)의 부처별, 회계별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액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세출예산 불용·이월액 발생요인에 관한 문헌조사 및 사업별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탐색할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소관별 불용·이월액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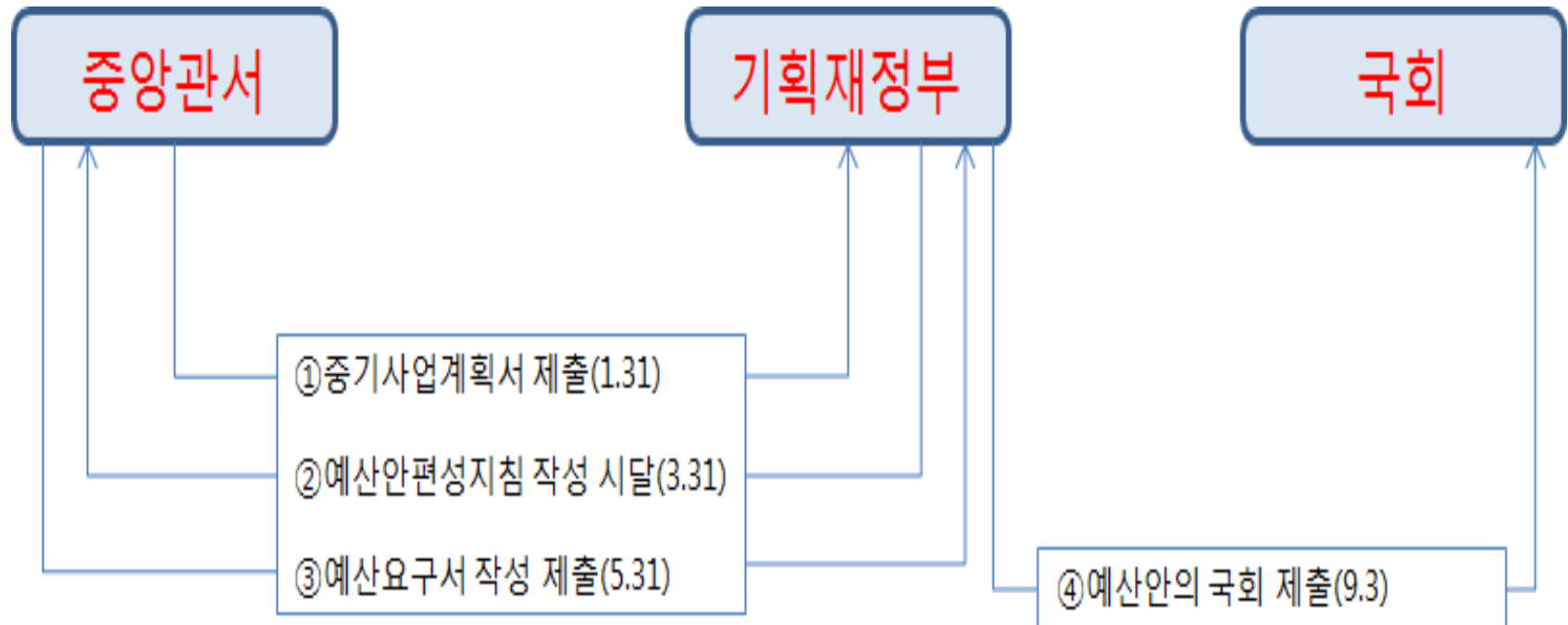
예산재정과정과 집행과정



구분	전년도 (2015년)	당해연도 (2016년)	다음연도 (2017년)
예산안 편성	2016년 예산편성	2017년 예산편성	2018년 예산편성
예산집행	2015년 예산집행	2016년 예산집행	2017년 예산집행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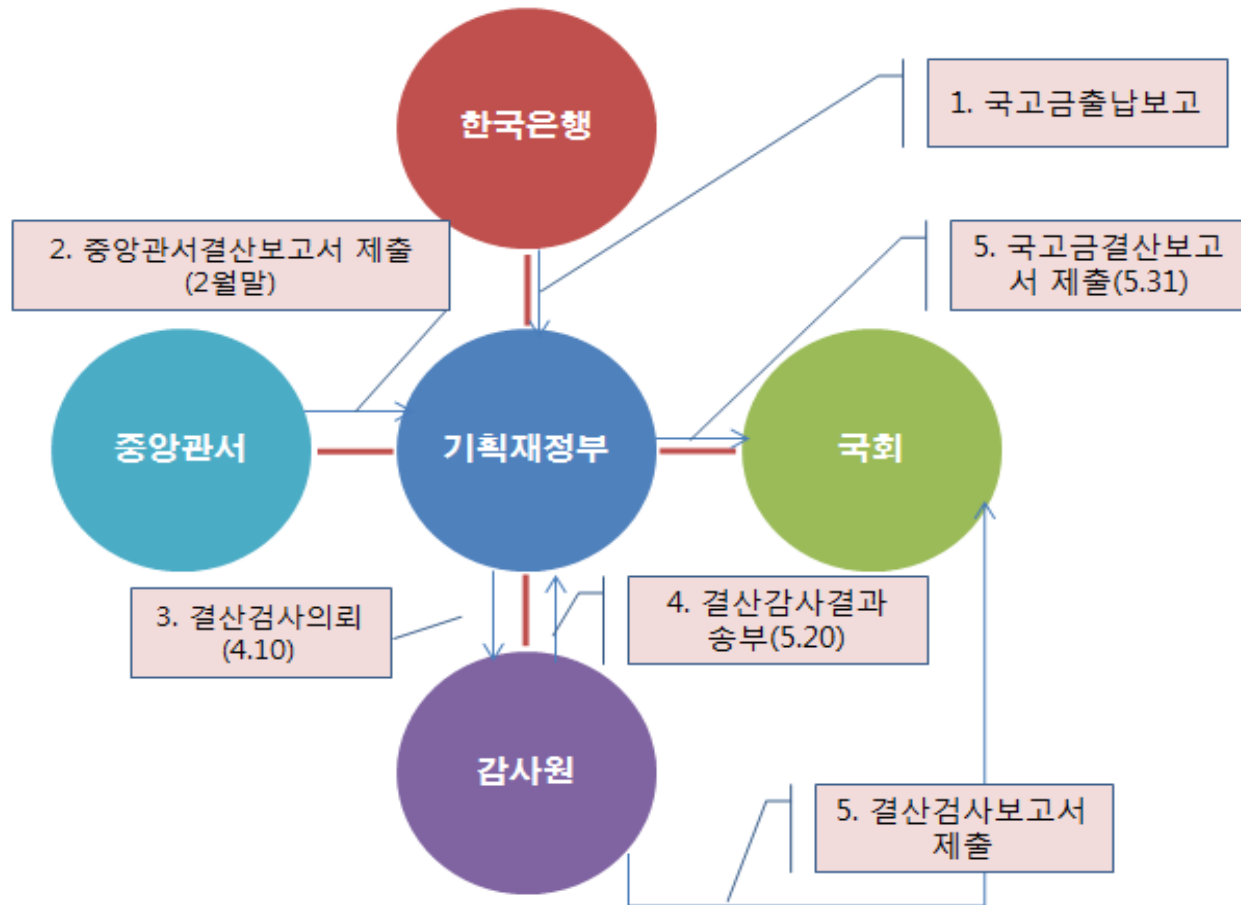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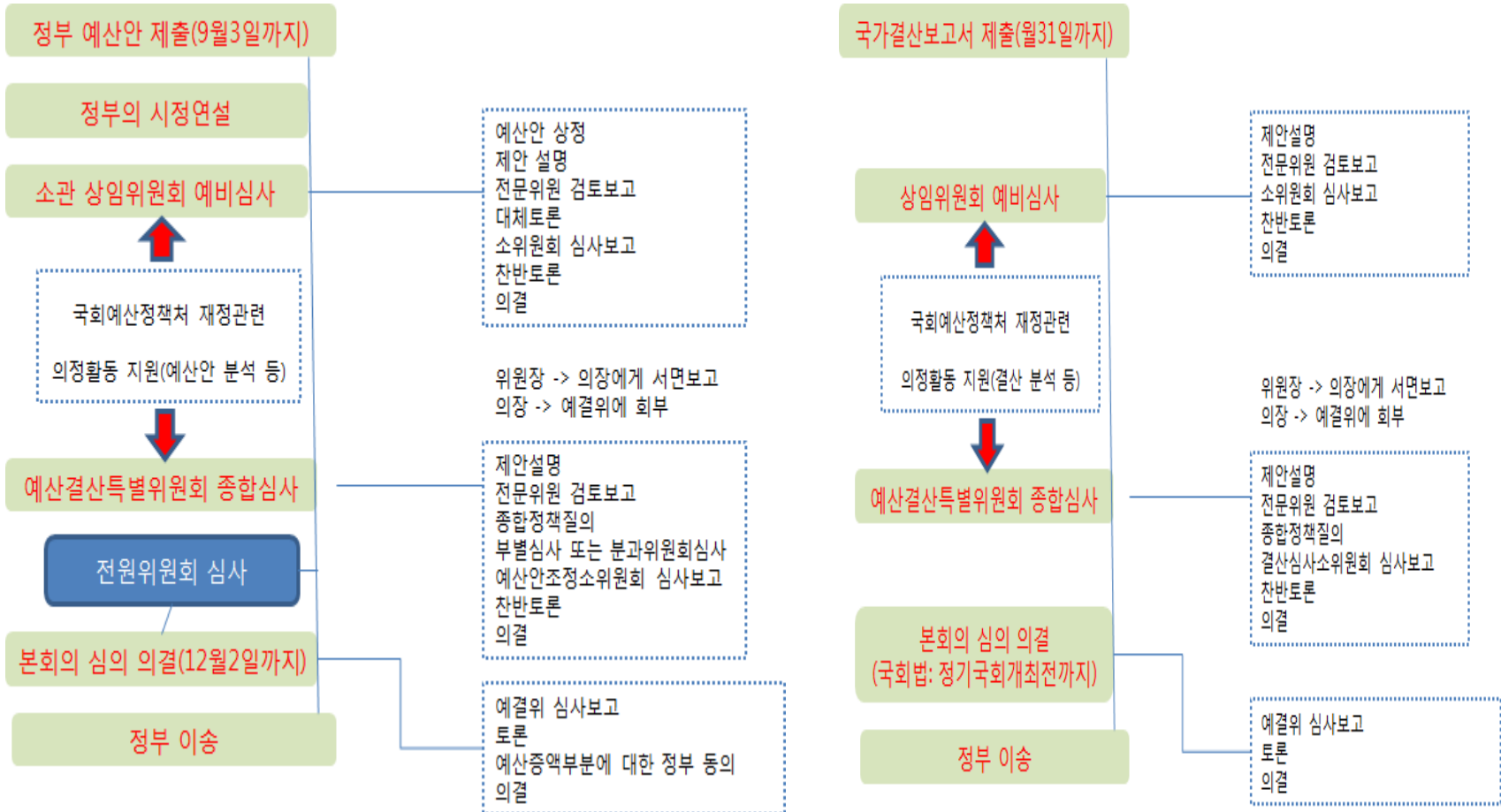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정부의 결산 과정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와 결산 심의절차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세계잉여금 발생원인과 처리방안

과목	발생원인		처리방안
세계잉여금	세입측면	경기호전에 따른 세외 수입	국채우선상환
	세출측면	이월액	
		불용액	

-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즉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 첫째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경기 호전에 따른 국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초과 징수 등)
- **둘째 세출예산 중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의 발생에 기인함 : 본 연구의 대상**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세계잉여금 발생원인과 처리방안

- 이월액은 차기연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차기연도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반면, 불용액은 차기연도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 이월액과 다름.
- 박근혜정부의 예산 불용액이 지난 정부보다 2.5배 많았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달랐음. 집행 관리 소홀로 재정이 경기 회복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
- 1월 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2013년 9.0%, 2014년 8.6%, 2015년 8.3함%, 2016년 8.2%, 2017년 8.2%로 매년 감소 추세.
- 1월 말 집행금액은 2014년, 2015년 25조~26조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2017년은 22조원대에 머물렀음.
- 집행금액은 2015년 123조3000억원에서 2016년 92조1000억원으로 30조 원 넘게 감소함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이월액과 불용액

명칭		내용
예산액	세입예산액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세입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세출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예비비지출액 + 이,전용등증감액
결산액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된 금액
	세출결산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월액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①명시이월	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월액	
②사고이월	이월할 것을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상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월액	
③계속비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정하여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금액	
불용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선행연구 검색결과 : 세입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세입 세출 불균형을 해소하려 함

- ▶ 국내선행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들과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검색단어를 '불용액', '이월액', '세계잉여금'으로 선정하고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2017년 3월 24일에 검색한 결과 김완용(2012)의 연구와 이현우 등(2012)의 연구가 검색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으로 접근하여 조세징수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 국외선행연구 : 선정된 검색어는 'Carry-over and the Unused of the Special Accounts'와 'Budget Surplus'이다. 검색데이터베이스는 사회과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EBSCO Host BSP(Business Search Premier)'를 사용하였으며, 검색일은 2017년 3월 24일. 검색결과 Alesina와 Alberto(2000), Harper와 Lim(1988), Harper 등 (1990), Heinrich 와 Janet(2005), Holman 와 Barry(2004), Palley 와 Thomas(2001) 등 6편이 검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을 과다한 세금징수에서 찾고 조세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음.

본 연구 : 세입 세출 불균형에 대해 세출측면에 초점을 둠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연구가설

-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자원조달 미비, 사업계획 미비, 예산절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
-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부담증가로 이어지므로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가 투자심사분석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 재무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공시되고 있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와 불용·이월액과 상관관계 파악을 통해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불용·이월액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함
- **연구가설**
 - 가설 1 : 전년도 이월액이 클수록 차기년도 이월액도 클 것이다.
 - 가설 2 : 전년도 세입이 많을수록 차기년도 불용액도 클 것이다.
 - 가설 3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을 통해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가설 4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을 통해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분석모형

➤ $UC_t(CO_{t+1}) = a + b_1TA_t + b_2PC_t + b_3UA_t + b_4PT_t + \varepsilon$

변수의 정의, UC : 불용액

CO : 이월액

TA : 유형자산

PC : 프로그램 순원가

UA : 비배분비용

ε : 오차항

➤ $\text{Logit}UC_t(\text{Logit}CO_{t+1}) = a + b_1TA_t + b_2PC_t + b_3UA_t + b_4PT_t + \varepsilon$

변수의 정의, LogitUC : 불용액 더미

LogitCO : 이월액 더미

TA : 유형자산

PC : 프로그램 순원가

UA : 비배분비용

ε : 오차항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세계잉여금 현황

기준년도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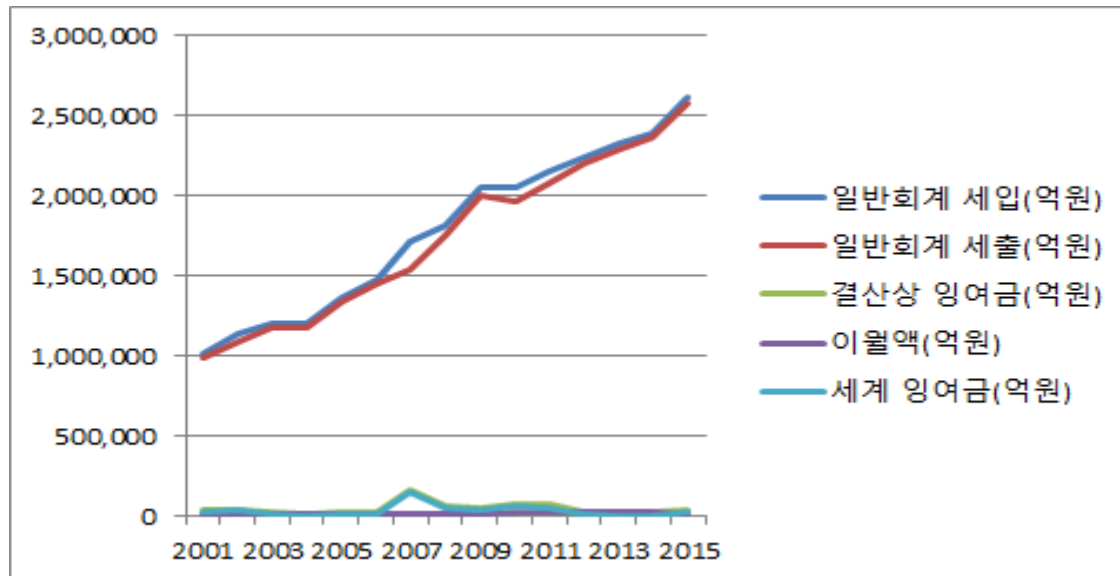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2*2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전후 분석모형

세입세출결산현황은 2007년부터 2010년(4개년 발생주의 도입전), 2011년부터 2015년(5개년 발생주의 도입 후)

Dependent variable : 이월액, 불용액 실험군(유형자산 상위 25%) 대조군(유형자산 하위 25%)

구분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 前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 後
실험군	I	II
대조군	III	IV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2015년 2014년 불용액 과다부처

단위 : 10억

2015년			2014년		
통일부	65.6%	1,233	통일부	55.6%	1,083
세월호참사	11.7%	1	조달청	44.7%	218
미래창조부	10.8%	1,863	농림축산식품부	10.1%	2,907
행복청	9.6%	103	행복청	9.9%	146
농촌진흥청	6.8%	95	산업통상자원부	9.5%	1,633
농림축산식품부	6.4%	1,901	문화체육관광부	8.7%	517
해양수산부	5.4%	37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8.3%	7
대통령경호실	5.3%	4	대통령경호실	7.7%	6
법제처	5.0%	1	미래창조과학부	7.6%	1,282
산업통상자원부	4.9%	932	금융위원회	5.5%	1,873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로써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유용성 검증

향후 연구계획

- 예산편성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 인터뷰 섭외 협조 요청
- 소관부처 연도별 불용액 이월액 현황 파악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국가재무제표 계정과목과 금액 추출
- 발생주의 국가회계와 불용액 이월액과 관계 분석
- 불용액 이월액 추정모형 도출과 검증
- 불용액 이월액 추정모형을 이용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개선방안

감사합니다

